

## [사설] 독립성·자율성 근거한 문화재단이라야

2009년 02월 06일 (금)

충청투데이

대전시가 연말 출범 목표로 대전문화재단 설립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으나 재단 설립시기가 구체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 지역 문화재단에 대한 벤치마킹을 마친 걸로 미뤄 상당한 진전이 있는 듯하다. 문화재단 설립은 지역의 문화지형을 바꿀 수도 있기에 문화계만의 최대 관심사는 아니다.

대전시는 문화재단 설립의 당위성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재단 설립 이유로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 전문성이 꼽힌다. 관주도의 문화예술 행정을 민간운영체제로 전환시킬 경우 지역문화 갈등 해소에도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재단이 설립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자치단체장이 재단을 좌지우지하거나 '옥상옥(屋上屋)'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까닭이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 제주 등이 잇따라 문화재단을 열었고 충남, 경남, 전북 등 여러 지자체가 설립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문화재단 전성시대를 방불케 한다. 재단의 주요 직책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게 대세이어서 자치단체장의 문화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재단은 있으나마나다.

기존 문화재단과는 차별화 전략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전은 과학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창조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대전문화재단의 비전은 일단 정해진 셈이다. 다만 재단의 업무관장 범위, 운영주체 구성 및 운영방식, 자원 등은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정될 일인 만큼 지역민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재단법인의 출연기금은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재단운동에는 3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나 시 조성 기금은 90억 원에 불과하다. 매년 보조금만 축내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금이 고갈되는 문화재단이 아닌 수익 창출형 문화재단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문화예술 분야에 재투자를 전제로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